



물(水) 사유화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물 사유화 NO!

물은 생명이다!

정부는 수돗물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있다

“물”을 사유화한다? 상상이 안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입니다. 정부는 2006년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사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지방상수도 164곳 중 9곳이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시 상수도는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양해각서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독점·공기업 사유화와 ‘초국적 자본의 자유세상’을 목표로 하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물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집니다. 전면적인 물 사유화 –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물 사유화는 사회적 재앙

■ 수도요금 폭등, 물이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

- 현재 지자체는 저렴한 수도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은 65%, 전국평균 89% 수준의 요금현실화율 유지
- 사유화되면 이런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고 요금현실화율은 100% 이상으로 높아져서 요금 인상 불가피
- ▶ 사유화 이후 우루과이는 요금이 10배 인상, 남아공 3년 동안 600% 요금인상
- ▶ 필리핀 마닐라 상수도 사유화 이후 일반 가정집 하루 4시간 물 공급

■ 농촌과 도시 지역 불평등 극대화, ‘물 양극화’ 심화

- 현재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35%
- 사유화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투자 더 기피 – 상수도 사각지대 확대

■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고용불안 초래

- 공사화·민간위탁으로 노동자 정리하고 또는 비정규직으로 전환
- 사유화의 철칙은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 확대 – 노동자 생존권 박탈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수도 사유화 이후 노동자 7,600명중 4,000명 해고
- ▶ 유럽 전역 전기·가스·수도 사유화 이후 노동조건 하락, 구조조정 기승

■ 수질악화와 환경오염 확대, 국민건강 위협

- 폐수방류, 수자원 난개발
- 수질관리에 대한 소홀함으로 수질 악화 우려
- ▶ 영국에서는 사유화 이후 수돗물 누수와 폐수방류사례 빈번하게 발생, 물에서 철 망간 다량 검출 및 수돗물 질 저하

■ 민중통제력 약화와 사회공공성 상실

- 민간위탁은 20~30년 장기계약, 계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
- 해외에서 사유화 이후 수질검사가 사라져 먹는 물에 대한 사회적 감독 기능 상실

나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민간위탁 예고

- 현재 인력 36명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 공무원 구조조정, 상용직 해고/비정규직화 불가피
- 향후 15~20년 간 수자원공사 600원/m³ 원가절감, 그러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현 783원/m³에서 1,306원/m³으로 167% 인상

물은 인권이요, 생명이다!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광역상수도 공사화
—알고보면 물 사유화 전초단계

수도 민간위탁/공사화를 중단하고
물 공공성을 강화하라!

물이 사유화되면
안전하고 공평하게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지고
물 이용의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민중이 늘어납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사유화 저지!!

물 사유화 저지 ·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Tel: 02-2631-1948 Fax 02-2631-1949 (전국공무원노조)

노동자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더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침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반고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환경정의

- 1 공적 책임을 민간자본에 떠넘기는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잉·중복투자 등의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 2 재정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힘들다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된 예산·시설을 지방 및 농촌지역이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 3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도 시설에 대한 민주적이 고 사회적인 참여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소유와 운영 모두 기업이 아닌 사회가 해야 합니다.
- 4 친환경성에 기반한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댐개발은 물의 오염과 고갈 등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개발만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는 수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